

동북아 질서 재편과 중·북한 관계

안 인 해*

◁ 목 次 ▷

- | | |
|----------------------------|-------------------|
| I. 서론 | III. 동북아 질서 재편 |
| II. 동북아 질서의 위계구조와 남북
관계 | IV. 탈냉전기 중·북한관계 |
| | V. 결론 : 중·북한관계 전망 |

I. 서 론

중국과 한반도의 역학관계는 위계구조 속에서 이미 장구한 세월을 통해 형성되었다. 19세기 말 우리들의 선조들은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속에서 망해 가는 淸과의 관계를 재정립한다는 외교적 원칙 하에 개화를 통한 자주 개혁을 주창하며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고자 하였다. 한편, 20세기 말 한반도는 새로운 동북아 질서 재편 과정 속에서 반세기에 걸친 분단을 극복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남한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 우호관계를 증진함으로써 통일에 유리한 주변환경을 만들고자 하며, 북한은 중국과의 혈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개혁·개

* 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방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외적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1세기 전 우리 선조들의 고민이 새롭게 태동하는 21세기 동북아 질서의 형성과정에서 어떻게 한민족의 이익을 올바르게 지키고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형태로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동북아 질서는 위계적 구조를 형성하면서, 냉전기와 탈냉전기를 거치면서 균형적 질서와 불균형적 질서를 이루어왔다. 냉전기에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양극체제가 상위구조를 이루면서, 일본과 중국을 중위구조로, 남한과 북한을 하위구조로 하는 동북아 위계질서가 형성·유지되었다. 이러한 수직적 구조는 두 강대국을 양 축으로 대립적이지만 안정적인 균형질서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의 관계도 경직된 상황에서 각각 미국과 소련과의 동맹관계에 충실하면서 냉전적 질서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

냉전구조의 형성 이후 가장 견고한 대립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던 동북아 국제질서는 1970년대 초반 이후 중·미관계의 개선과정을 거치면서 서서히 변화되어, 냉전적인 적대관계가 한반도에서만 국지적·제한적 형태로 존재하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1990년대 초 한반도에서는 한·중수교를 계기로 남북한간의 세력균형이 깨어지면서 불균형질서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불균형질서는 북·미관계 개선을 계기로 남북한에 대한 주변 4국의 상호교차승인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균형질서로 변화해 갈 전망이다. 특히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게 「4자회담」을 제의(1996.4)함에 따라,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질서는 남한과 북한간의 직접합의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이 이를 승인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통일환경을 이루게 될 한반도내 평화질서 및 동북아 질서 재편과정에서, 동북아 질서 재편을 둘러싸고 「패권적 갈등」을 겪을 조짐을 보이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남·북한관계를 중국과 미국의 패권적 갈등을 기본 요소로 하는 동북아 질서 재편과정과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동북아 질서의 구조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탈냉전기 동북아

질서의 변화 과정에서 갈등과 화해과정을 거치면서 전략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냉전시대에서 탈냉전시대로의 이행과정에서 아직까지도 국지적 냉전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주변 강대국에 의한 남북한의 교차승인을 통해 새로운 균형질서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다.

II. 동북아 질서의 위계구조와 남북관계

1. 동북아 질서의 구조적 변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질서는 역내 행위자들간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상위구조와 하위구조로 형성된 위계적 구조로 파악된다. 강대국들간의 관계로 나타나는 상위구조와 약소국들간의 관계로 나타나는 하위구조는 상호 균형적 질서를 이루기도 하고 불균형적 질서를 이루기도 하면서 동북아의 세력균형을 규정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북아 질서의 위계적 구조변화를 네 시기로 구분하여 서술해 볼 수 있다.

가. 냉전적 구조

균형질서

동북아 지역에서는 1945년에서 1970년대 초까지 미국과 소련을 양극으로 하는 전지구적인 진영적·체제적 적대관계를 상위구조로 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남한-미국/일본 대 북한-소련/중국의 냉전적 관계가 지속되었다. 상위체계인 지구적 냉전구조와 하위체계인 한반도에서의 대립구조는 일관성을 지니면서, 동북아에서 냉전적 균형질서를 형성해 왔다.

불균형질서

양극체제를 이끌어 오던 소련과 미국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1970년대 초반부터 1980년대 말까지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협력관계가 태동하였다. 중국이 새로운 지역강대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미국은 중국을 동북아 질서 재편에서 중요한 제3의 세력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동북아질서를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질서재편은 직접적으로 하위체계인 한반도내 세력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한 예로 남·북한의 접촉이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동북아에서는 미국·중국 대 소련이라는 상위 냉전구조와 한반도에서의 남한 대 북한이라는 하위 냉전구조가 서로 어긋나면서, 불균형 질서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나. 탈냉전적 구조

불균형질서

전지구적으로 경제발전을 우선시하는 탈이데올로기의 기류를 타고 냉전구조가 타파되면서,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동북아에서는 냉전적 질서가 붕괴되면서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일종의 냉전적 균형질서에서 탈냉전적 불균형질서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우선, 상위질서의 차원에서 보면, 소련의 붕괴에 따라 대립의 기본구조가 변경되고, 미국의 우위가 절대화되기 시작하였다. 한반도라는 하위질서에서도 남한의 대북한 우위가 단순히 경제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외교적 차원에서도 형성되었다. 즉, 남한이 소련 및 중국과의 수교를 선점함에 따라, 북한의 고립화가 심화되는 불균형 질서가 한반도에서 형성되었다.

균형질서모색

1990년 대 초반 이후 동북아에서 상위체계에서의 불균형과 하위체계에서의 불균형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동북아 질서 재편과정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여진 국가들로서는 새로운 동북아 질서 형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게 되었다.¹⁾

우선 중국은 미국주도의 유일초강대국체계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는데, 특히 동북아에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적어도 묵시적인 승인이라도 하지 않는다면 역내의 안정과 평화는 위협받을 수도 있게 되었다. 이는 중국이 내정간섭 배제원칙과 함께 미국에 대한 반패권주의를 내세우게 되어 본질적으로는 중국과 미국간의 패권적 딜레마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위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하위구조로서 한반도에서도 탈냉전적 균형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의 대미 접근과 대일 수교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2. 하위구조로서의 남북관계

동북아 질서가 위계구조로 형성되어 있다면, 상위구조의 성격은 하위구조 행위자들의 행위를 일방적으로 규정할 것인가? 이 문제를 남북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동북아 위계질서에서 하위구조에 해당하는 남북관계는 상위구조의 성격에 종속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실질적으로 남북관계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남북한간 직접대화의 변화 추이를 보면, 상위구조의 성격변화가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판단된다. 상위구조에서 냉전적 균형질서가 지배적이었던 1970년대 초반까지 남북한간에는 실질적인 접촉이 없었으나, 상위구조에서 냉전적 균형질서가 변화를 겪게 되면서부터 남북한간에는 직접접촉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하위구조에 속한 남북한이라는 국제행위자가 이러한 행위유형을 보이는 이유를 가설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먼저, 냉전적 균형질서하에서는 남한과 북한이 상위구조와의 연계에 오히려 외교력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하위구조에서의 상대국에 대하여 직접 접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반면, 상위구조에서 질서가 불안정한 불균형적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상위구조의 불확실성이 하위구조 행위자들의 행위방향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이에 따라 하위구조에 속한 남북한은 쌍방간의 직접대화를 모색하게 되고 그 결과 활

1) 그러나 1990년대 초반 이후 형성된 불균형질서는 변화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긴 하지만, 불안정하지는 않다.

발한 남북접촉이 이루어진다.

상위구조에서 불균형적 특징이 두드러지는 1970년대 초와 1990년대 초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여러 가지 유사성이 발견된다. 1970년대 초반 미·소데탕트가 이루어지고 중·미관계가 우호적으로 변화하면서, 미국은 「닉슨 독트린」을 통해 아시아문제에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하겠다는 원칙 하에 주한미군 철수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상위구조의 질서 변화에 따라 당시 한국정부는 국제적 데탕트의 기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의 하나로 남북대화에 눈을 돌린다. 이는 70년대 방식의 북방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1972년 「7·4공동성명」으로 정점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미군철수 계획 무산과 함께 북한이 이를 외면하게 됨으로써 남북대화는 다시 냉각기에 접어든다.

1990년대 구소련 및 동구권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의 몰락은 동북아 상위구조에서 새로운 불균형 질서를 유발하였다. 이러한 탈냉전적 구조에서 한국의 북방정책은 성공을 거둘 수 있었고 상위체제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하위체제에서도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남북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했으며, 이는 오히려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남북대화는 단순히 양적으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겪는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남북대화가 정치회담의 성격을 띠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남한과 북한은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1988년 8월 19일 이후),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예비회담(1989년 2월 8일 이후), 남북고위급회담(1990년 9월 4일 이후)을 통해 상호관계 발전을 도모하였다. 특히,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이 쌍방 합의로 타결되었다(1991.12.12). 또한, 남북한 핵문제 타결을 위한 별도의 대표접촉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1991.12.31)을 채택함으로써 남북대화는 남북한간의 긴장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²⁾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 동북아에서의 상위구조와 하위구조를

2) 1990년대 전후의 남북대화에 대해서는 「통일백서 1995」, pp. 183~210 참조.

보면, 상위구조로서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하위구조로서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위구조 내에서 중위구조라고 규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국가로서 일본과 러시아를 들 수 있다. 최근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신안보선언」을 통한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통한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내외에 천명함으로써 입지확보를 겨냥하고 있다.

이러한 상위-중위-하위 구조는 별개의 체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면서 상호 협력과 견제에 중요한 변수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그러나, 상위구조가 동북아 질서 전체를 우선적으로 규정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구성하는 중국과 미국은 향후 동북아질서 재편과정에서의 결정적 행위자인 동시에 중·미관계는 동북아질서의 성격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Ⅲ. 동북아 질서 재편

1. 패권적 갈등구조 : 중국과 미국

소련의 붕괴 이후 유일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미국에 대적하여, 사회주의의 종주국임을 자임하는 중국은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유지 및 확대를 꾀하고 있다. 21세기에 미국에 대적할 수 있는 초강대국으로서의 잠재성을 평가받고 있는 중국은 정치·안보 및 경제적 측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중국은 경제력에 상응하는 지구적 정치력을 확보하고자 하며, 이는 전지구적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는 미국의 이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막대한 대미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미국은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지적소유권 문제, 최혜국대우 문제 등을 제기함으로써 경제적 마찰을 빚고

있고, 또한 인권 및 대만 문제 등 정치적 현안에서도 중국과 첨예한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과 미국은 1970년대 초반 구소련에 대항하여 형성하였던 전략적 유대관계에서 탈피하여 1990년대에는 패권적 갈등을 겪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은 상호 패권주의를 견제하면서도 경제·안보측면에서의 보완적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를 안고 있기도 하다. 또한 중위구조라고 할 수 있는 일본과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각각 미·일 신안보선언과, 중·러협력관계 유지를 통해서 세력균형유지를 위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 질서 재편 움직임을 중국의 관점에서 중·미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은 미국에 대한 견제정책의 일환으로 주변국가들과의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동북아 지역 내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동북아 패권전략 하에서 중·미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최근 중국과 미국은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호 화해를 모색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을 공유³⁾하고는 있으나, 대만 및 인권 문제, 핵실험 및 무기판매, 지적 소유권 및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문제 등 갈등요인을 가지고 있다.

첫째, 최근 미국과 중국은 대만문제를 둘러싸고 상호 불신과 첨예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미국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함에 따라 미국내에서 대만에 대한 동정적 여론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李登輝 대만 총통의 사적인 미국방문을 허용한다는 미국무부의 발표(1995.5.22)로 이어졌고, 중·미관계 악화의 기폭제가 되었다. 대만에서 최초로 실시(1996.3.23)된 총통 직접선거 과정에서 대만독립 주장을 저지하기 위해 대만의 양대 항구인 基隆과 高雄港 부근에서 중국은 대만에 대해 군사위협을 가하였다. 이에 따라 미 의회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공격시 미국의 군사개입 촉구 결의안」(1996.3.21)과 「대외관계 수권법안」을 통과(1996.3.28)시켜 클린턴 행정부에게 군사무기를 포함하여 대만과의 관계를 격상시키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이에 미국은 대만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3) 올해 중·미간에는 외무장관 회담(1996.4.19, 헤이그)과 레이크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방중(7.8~10) 및 吳儀 중국 대외경제무역합작부장의 방미(9.26~27)를 계기로 쌍무간 안보·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에 다소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명분아래 대만해협 인근에 두 개의 항공모함 전단을 파견하여 중국의 군사 행동을 견제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중·미관계는 군사적 위기상황으로까지 치달았다.

둘째, 미국은 중국의 인권에 대해 일본과 EU 등 서방의 국가들과 제휴를 통해 중국의 인권상태를 개선하고 중국의 개방과 민주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미국은 「국가별 인권상황보고서」에서 중국의 인권상황을 비난(1996.3.6)하면서, 중국 인권문제를 유엔 인권위원회 제52차 회의에서 제기(4.23)하여 반체제인사에 대한 탄압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미 하원도 「중국인권 결의안」을 통과(6.27)시켜 魏京生과 王丹 등 반체제인사와 티벳에 대한 중국정부의 탄압을 비난하였다. 중국은 인권문제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괄목할 만한 개선에 대해서는 「미·중인권 비교보고서」를 발간(3.29), 경제적으로 낙후된 나라로서 인권보다도 발전권과 생존권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대응하면서 “내정간섭”과 “주권침해”를 내세워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홍콩주권 반환과 鄧小平 사후의 권력승계문제에 직면해 있는 중국 지도부로서는 국내 안정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반체제 인사에 대한 탄압도 지속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는 중국과 미국간의 계속적 갈등요인으로 존속할 것이다.

셋째, 미국은 핵무기확산방지를 위하여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중국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제3세계 협력을 명분으로 대이란 원전(300 MW 급 2기, 12억 달러) 공급 및 대이란·파키스탄 미사일 판매를 추진해 왔다. 또한 중국은 NPT 체제의 무기한연장에 합의(1995.5.12)한 직후 지하핵실험(5.15, 8.17)을 감행함으로써 세계적인 비난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러나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자국이 안정과괴 국가로 낙인찍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핵실험 중단 의사를 표명(1996.7.29)하고, 지역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한 핵기술 판매를 자제하겠다는 태도를 취함으로써(1996.11.4), 양국간 갈등이 더 이상 표면화 되지는 않았다. 윈스턴 로드 차관보는 미국이 중국과의 긴장관계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미국과 중국은 결국 장기적인 적대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넷째, 중·미간에 경제적 마찰요인들이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조짐이 보이기는 했으나 경제의 상호 보완적 필요성에 따라 경제교류는 꾸준히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1995년 중국과의 교역에서 338억 달러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한 이유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여 중국정부에게 관세율 인하와 엄격한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 시행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캔터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대중 보복조치를 단행하겠다고 경고(1996.1.31)하고, 중국산 대미 수출품(30억 달러)에 대해 100%의 보복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5.16)하였다. 이러한 중·미간 갈등은 중국이 불법 CD 복제품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약속(6.17)함으로써 더 이상 표면화되지는 않고 있으나, 지방분권화로 인한 중국 중앙정부의 통제력 약화로 지적재산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중간의 경제적 갈등은 지속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갈등요인을 갖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동북아질서 재편에서 상대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미국의 평가를 살펴보면, 첫째, 미국은 소련이 붕괴된 지금 중국이 오히려 환태평양 역내에서 세력균형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도전세력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동아시아 전략보고서」(EASR, 1995.2)와 「나이 이시사티브」(the Nye Initiative)를 통해 적극적인 동아시아 참여정책을 표명하고 있다. 둘째, 냉전 종식으로 중국의 전략적 가치는 이전보다 감소되었으나 국제문제 해결과 지역분쟁해결에서 중국의 협조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인식 하에 미국은 「하나의 중국」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정치·군사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鄧小平 사후에 중국 미래의 진로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의 평가를 살펴보면, 첫째, 중국은 미국이 티벳에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사자와 같이 강한 어조로 반격하고 있으나 옐친의 체치니아 공격에 대해서는 생쥐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간주하면서 불만

을 토로한다. 둘째, 세계적인 탈냉전에 따른 동북아 질서 재편과정에서 중국은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전반적인 영향력 확대 기도에 불만을 품어 왔다.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북한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중관계 정상화를 달성한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지지보다는 핵개발을 포함하는 비이성적 정책에 대한 지지 철회로 보다 균형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⁴⁾ 그러나, 중국은 북·미회담 타결 이후 북·미간 관계개선이 북한을 중국의 영향권에서 이탈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이 장기적으로 중국과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和平演變’시켜서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체제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지도부는 鄧小平 이후 권력다툼이 일어난다면 중국의 정치제도와 사회질서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허약해져서 미국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한 이후 미국이 중국과의 갈등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대중 포용정책을 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중국도 1997년 15차 당대회 개최와 홍콩주권 회수 등 대내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미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은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의 방중(1996.11.19~21)과 중·미 정상회담(11.24) 및 遲浩田 중국 국방장관의 방미(12.2) 등을 실현시켰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고어 미 부통령의 방중이 예정되어 있고, 1997년 11월에는 江澤民 주석이 미국을 공식 방문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중국 최고 지도자의 미국방문은 1989년 天安門사건 이후 냉각된 양국관계를 반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미 양국 지도자간 교환방문에도 불구하고 대만문제와 인권문제에 대한 상호간 입장차이가 근원적으로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중국내 민족주의 추세와 미 의회의 반중국적 입장을 고려할 때 상호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은 지속될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역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패권정책을 견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

4) 蜀聲, “中共鬪美一王牌-北韓核武,” 「爭鳴」(1994.5), p. 77.

로는 미국과 견고한 경제 및 안보협력관계를 적극 모색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중국은 미국의 발달된 기술과 자본뿐만 아니라 최대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게 해주고 있는 미국 시장을 놓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은 적어도 동아시아문제에 있어서 역내질서 유지와 분쟁해결에 중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동시에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봉쇄해야 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의 패권전략에는 반기를 들면서도 보다 긴밀한 경제·안보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고민을 안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 중·미관계에는 견제요인과 협력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2. 남북한 교차승인과 한반도 균형질서

1980년대 말부터 동북아 상위구조에서의 불균형이 형성된 상황에서 조성되었던 직접접촉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은 1993년 이후 몇 차례의 위기를 거치면서 남북관계의 단절 혹은 한반도의 긴장으로 전환되었다. 1990년대 초 남북관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를 바탕으로 얻고자 했던 체제유지를 위한 교차승인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또한 자신들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만한 경제적 지원과 계기도 마련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동북아에서 하위구조로서의 남북관계는 남한의 북방정책에 따른 대러시아 및 대중국에 대한 외교 선점으로 불균형을 이루게 되었고, 상위구조인 중국과 미국이 경쟁적 구도 속에서 균형을 잡아감에 따라 정체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탈냉전적 구조로의 전환기에 불균형질서에서 균형질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동북아에서 하위구조의 역할에 머물러 있던 한반도의 질서는 향후 질서재편의 중심축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돌이켜 보면, 1945년부터 1953년까지는 냉전구조가 한반도에서, 동북아로, 그리고 세계로 확산되었다. 이제 한반도가 탈냉전구조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1990년대 말부터는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질서가 동북아 질서를 좌우할 것으로 기대해 볼 만하다.

이와 같은 시점에 「4자회담」 제안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4자회담」을 남한과 미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위구조로서 중국이 차지하는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4자회담」 당사국으로 지정된 중국의 북한태도 지지여부는 북한의 대미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은 「4자회담」 제의에 대해 신중한 자세로 일관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일차적으로 남북한간에 논의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⁵⁾ 이러한 「4자회담」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려는 북한의 전력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4자회담」에서 중국의 회담참여문제와 관련하여 북·중간에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으로서는 북한체제의 붕괴 등 한반도에서의 현상타파가 자국에 불리하다는 판단 하에 북한에 대한 지원정책을 계속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북·대만 관계개선⁶⁾에 제동을 걸고 북·미 관계개선을 통한 미국의 동북아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서도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미·일 신안보선언」(1996.4.17)을 계기로 21세기 잠재적 적대국으로 부상하게 될 일본을 의식해서라도 한반도에서 교두보를 확대하기 위한 대북 지원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⁷⁾ 이것은 중국과 미국이라는 상위구조가 남한과 북한인 하위구조에 영향력을 확보함으로써 탈냉전적 균형질서를 지향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고집하고 있는 북한은 「4자회담」에 대해 거부·수용·수정제의·수용지연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전통적으로 남한 배제 논리를 고수해 온 북한의 태도를 감안한다면 거부가능성이 높은 것도

5) 헤이그에서 개최된 미 중 외무장관 회담에서 錢其琛 중국 외교부장은 「4자회담」과 관련하여 한반도문제의 남북한 당사자 해결 원칙을 밝혔다. 1996.4.20.

6) 북한은 대만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중국에 대한 견제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만은 북한과의 경제협력 강화 및 식량원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 대표단을 초청하였다. 1996.3.3.

7) 「중앙일보」, 1996.11.9.

사실이지만, 연방제 수정, UN가입(1991.9)을 통한 ‘하나의 조선’ 논리 포기, 反美主義 수정 등 북한은 이미 많은 정책전환을 실행해 왔다는 점에서 「4자회담」 수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이 「4자회담」을 수용하는 경우에도 북·미간 평화협정 원칙을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은 「4자회담」을 통해 북·미 직접협상을 집요하게 주장하는 한편, 「4자회담」에는 형식적으로만 참석하고 실질적으로는 미국과 막후협상을 지속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북한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4자회담」을 결렬시켜 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⁸⁾

북한은 지금까지 강대국간의 갈등에 대처하기 위해 갈등관계에 있는 강대국에 대해서는 등거리외교정책을 선택해 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북한은 중·미간에 전개되고 있는 갈등구조를 최대한 활용하여 국익을 극대화시키고자 할 것이다. 이것은 상위구조의 대립적 상황에서 오히려 균형질서를 찾아 정치·경제적 및 군사적 이익까지도 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탈냉전기 외교전략으로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은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4자회담」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4자회담」 수용을 전·후로 대미·중 접근을 통한 지속적인 남한배제 노력을 경주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북·미관계는 북한의 대미 관계개선을 통한 한국배제, 북·미 평화협정체결, 경제지원 확보 노력과 미국의 대북 연착륙정책으로 인해 보다 긴밀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북·중관계는 이데올로기적 유대관계보다는 國家對 國家의 일반적 관계로 전환될 것이나 북한의 정치경제적 필요성과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 확대 노력으로 인해 한·중 수교 직후의 소원했던 관계를 극복하여 보다 밀접한 관계로 회복될 것으로

8) 한편 중국을 배제한 「3자회담」 제의를 고려할 수 있으나 중국 배제시 중국으로부터의 정치·군사적 지원에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위험부담이 따른다는 점에서 북한이 이러한 제의를 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북한은 「4자회담」 수용여부를 결정할 때는 물론 「4자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남한의 對中 공조노력을 무산시키고 전통적인 북·중 혈맹관계를 들어 북·중 공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전망해 볼 수 있다.

동북아에서 구소련의 몰락으로 초래되기 시작한 탈냉전적 불균형질서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남북접촉은 중국과 미국이 패권적 갈등을 겪는 대립형태를 보이면서 오히려 탈냉전적 균형질서를 잡아감에 따라 퇴색하고 있다. 상위구조의 갈등 하에서 대서방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경제난 탈피 및 체제유지를 위한 돌파구를 찾으려는 북한의 간접외교 강화는 남북대화를 북·미직접협상의 수단으로 전략하게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남한은 한·미공조체제를 바탕으로 남북대화 우선원칙을 내세움으로써 남북상호 불신의 벽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IV. 탈냉전기 중·북한관계

현존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종주국을 자처하고 있는 중국은 북한의 체제 유지 및 체제변화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북한의 변화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짐에 따라, 중국이 한반도 및 주변 정세에 미칠 영향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아울러 중국과 북한에서는 혁명 초기부터 존재하던 지도자의 사망에 따른 공산혁명세대의 퇴진이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부의 세대교체와 더불어 정책전환이 예상된다. 이러한 중국과 북한의 변화의 시점을 앞두고 본 절에서는 1990년대 탈냉전기 중·북관계 변화과정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질서는 과거 미·소 냉전시대의 「균형질서」에서 한국의 러시아 및 중국과의 관계정상화에 따라 「불균형질서」로 전환되었는데, 이것은 1992년 8월에 이루어진 한·중수교 이후 중·북관계가 냉각됨으로써 더욱 부각되었다. 따라서 이 시점을 중심으로 90년대 중·북관계의 변천과정을 갈등과 화해, 전략적 유대관계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1. 갈등과 화해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탈냉전 조류의 격변기를 거치면서 동북아에서 새로운 질서 재편의 움직임이 태동하는 가운데, 남한의 북방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얻어 중국과 한반도의 관계에서 역사적 전환점으로 기록될 수 있는 한·중수교가 1992년 8월에 이루어짐으로써, 북경과 평양의 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다.⁹⁾ 북한은 유일한 동맹국인 중국마저도 비난하게 되었으며,¹⁰⁾ 나아가 주중대사를 소환하는 등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었다. 중국도 러시아가 군수물자지원을 중단한 이후 북한에 대한 군사지원을 감축하였으며,¹¹⁾ 북한의 군사적 요구가 있더라도 방어목적이 아니라면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¹²⁾ 중국은 1993년 초반 김일성과 김정일의 생일뿐만 아니라, 조선인민군 창건일에도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다. 특히 같은 해 3월에 접어들면서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탈퇴 위협 이후,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핵문제해결을 둘러싸고 더욱 소원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냉각된 북한과의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 국가발전 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한편, 1993년 3월 러시아는 균형외교를 천명하면서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개선 용의를 표명하였으며,¹³⁾ 4월 말 고위급 관리를 서울에 파견하여 북한에 가스 및 무기공급을 재개하는 등 북한과의 관계회복을 희망하고 있다는 자국의 결정을 알려주었다.¹⁴⁾ 이러한 러시아의 대북 관계개선 움직임에 자극을 받은 중국은 6월에 국방부 성명을 통해 한국전쟁에 참여한 것은 북한이 변경국이기 때문이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으며, 일본의 공명당 당

9) 「新報」, 1993.5.7.

10) 북한 「중앙방송」, 1992.9.27.

11) 「鏡報」, 1993년 6월호.

12)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1993.4.13.

13) 러시아는 핵관련 6개국회의를 제의하여 동북아 지역에서 입지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러시아 외무성 아·태총국장 솔로비요프는 「동북아 6개국 긴급회의」를 제안하였다. 1993.3.19.

14) 러시아의 Kolkomov 외무부차관, 1993.4.29.

수 이시다를 접견하는 자리에서 江澤民 주석은 북·중관계가 6.25 전쟁으로 맺어졌지만 동맹관계는 아니라고 밝혔다.¹⁵⁾ 이는 미국과 남한에게 중국의 변방외교를 일깨워주는 것으로, 한·중관계를 유지하지만 북한과는 사회주의 동맹관계가 끊어진다고 해도 중국의 변방외교는 지속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서 조선전쟁 승리탑 및 기념관 건립시(1993.7.23) 중국은 김정일과 비슷한 나이의 차세대지도자인 胡錦濤 당정치국상무위원과 遲浩田 국방부장관을 포함하는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하여 김일성 사후 김정일체제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하였으며,¹⁶⁾ 중국의 李鵬 총리도 김일성·김정일 승계체제를 지지한다는 최초의 공식 선언(1993.9.9)을 하였다. 또한 遲浩田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과대 평가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였고(1993.9.9), 李鵬총리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하여(93.10.28) 북한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약속했다.

중국의 이와 같은 입장에 힘입어 북한은 1993년 10월에 미국의 에커만 아세아·태평양 소위원회위원장의 방북시 미국측에게 핵문제의 일괄타결에 대한 입장을 타진하였으며,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이 공식적으로 1개월 후에 뉴욕에서 일괄타결 방식을 제안하여 북·미회담에서의 일괄타결방안을 공론화하였다.¹⁷⁾ 북한은 이러한 주장이 3단계 2차 북·미회담에서 관철됨(1994.10.21)으로써 외교적 승리를 거두었다고 자축하고, 또한 중국의 지지가 유효하였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판단된다.

1994년에 들어와서 중국과 북한은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시작했다.¹⁸⁾ 중국의 錢其琛 부총리는 북한에 대한 어떠한 제재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¹⁹⁾ 이것은 중국이 북한과 사회주의 동맹을 지속하지

15) 「북한추세」(서울: 통일원, 1991.10), p. 147.

16) *FBIS-CHI-93-114*, 1993.7.29.

17) 강석주 외교부 제1 부부장은 일괄타결방식에 의해서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북한측의 핵투명성을 보장받는 대가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해소(북미수교, 북한체제의 인정,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등)를 요구하였다. 1993.11.12.

않더라도 체제와 경제·군사문제에서의 지지는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며, 또한 중국측으로서 할 수 있는 배려는 모두 하겠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1993~94년에 걸쳐 한·중수교 이후 냉각기를 맞이하였던 중국과 북한은 갈등과 화해적 제스처를 반복하면서 관계복원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 시기 중국과 북한은 동북아 질서 재편과정에서 상호 견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당면하고 있는 대내외의 산적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한의 노력이 북·미합의로 나타나고 북·미간 핵협상이 양측의 협상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북·미간의 협상타결과 북한의 대화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중국은 이 과정을 통해 북한이라는 군사적 긴장 유발 가능세력을 현상유지세력으로 끌어안을 수 있게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중·북 상호간의 전략적 유대관계를 지속하고자 하였다.²⁰⁾

이러한 중·북관계의 설정에는 미·중관계의 변화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에 따라 중국과 북한의 전략적 유대관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동북아 패권 전략은 국제무대에서의 자국의 지위향상과 영향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계속될 것이며, 중·미관계는 과거의 밀접한 전략적 협력관계로 되돌아가기보다는 양국의 현실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협력과 갈등의 양면성 속에서 전개될 것이다. 또한 중국은 북·미회담 타결 이후 북·미관계개선이 북한을 중국의 영향권에서 이탈하게 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이 장기적으로 중국과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和平演變」시켜서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18) 북한의 최광 참모총장이 6월 7일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부문지원을 약속하였으며 북한은 그 대가로 동해안의 항구 사용권을 양도하고 시멘트와 비철금속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FBIS-Chi-94-113*, 13 June 1994, p. 4.

19) "Qian Qichen Views International Situation, Foreign Policy," *FBIS-CHI-94-112*, 10 June 1994, p. 1; "China's Opposition to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FBIS-CHI-94-117*, 17 June 1994, p. 8.

20) 李鵬 총리는 김정일 체제 지지를 재표명하였다. 「新華通信」, 1995.1.18.

2. 전략적 유대관계 모색

동북아 질서가 미국을 축으로 재편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중봉쇄 의도를 의심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무기판매 및 군사협력체제를 강화하는 등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상당한 타격을 가하고자 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중·미간에 패권적 갈등이 지속되고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질서 모색이 계속되는 동안 중국은 북한과의 전략적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중·미관계 및 한·중관계를 포함한 동북아 정책을 재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동북아 신질서 재편과정에서 중·미간의 관계가 복잡해지는 가운데, 중국과 북한은 갈등과 화해 과정을 거치면서 상호 이해관계를 위한 전략적 유대형성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최근의 중·북관계 변화를 정치·안보 및 경제부문으로 나누어, 전략적 유대관계 모색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해 보고자 한다.

가. 정 치

정치적인 면에서 중·북관계는 1996년도 상반기 동안 다소 부정적 요인들이 나타남에 따라 상호간에 불편한 심기가 노출되었다. 우선 중국은 북한의 식량부족사태를 피해 자국으로 몰려오는 난민억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대량난민을 수용할 능력이 부족하고 장래 자치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吉林省에 북한난민 유입으로 인한 조선족의 증가를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탈북난민들의 문제를 북한과의 외교관계에서 중요한 문제로 다룬다.²¹⁾ 현재, 두만강 등 국경지역에서의 북한인 불법 월경

21) 월스트리트 저널, 1996.2.10. 북한 탈북자 유입을 사실상 묵인해 왔던 중국 정부는 북중 국경통제를 강화해서 탈북자를 엄격히 통제할 계획으로 1) 국경 수비대 증강배치, 2) 탈북자 북한인도, 3) 탈북자 관련 정보교환 강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앙일보」, 1996.3.16.

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한 가운데 중국과 북한이 국경회담을 갖고 치안확보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²²⁾

한편, 1996년 초 북한이 일부 국가(중국을 지칭)가 걸으로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자본주의 길을 걷고 있다는 내용으로 중국을 간접 비난함으로써, 중국과 북한간에는 갈등이 야기되었다.²³⁾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국의 당 대외연락 부장인 李淑□은 다른 국가의 당에 대해 한국 국가가 자신들의 견해나 관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북한을 간접 비난하는 내용을 언급하기도 하였다.²⁴⁾ 또한 북한이 안승운 목사 납치 주범인 리경춘(40)에 대한 사법처리방침에 강력히 항의함으로써, 중·북간에는 외교적 갈등이 높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은 전인대(1996.3)를 통해 대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서 조선(북한)과는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발전시키면서 한국과는 평등·호혜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북한과는 정치분야, 한국과는 경제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기본방침을 재천명하였다.²⁵⁾ 이에 따라, 1996년 4월 이후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급속히 개선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중국의 대북관계개선 노력에 대해 북한은 올해 5월 홍성남 부총리 외에도 3개 대표단을 중국에 파견하여 대중 친선 공세를 적극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⁶⁾

22) 李記周 공안부부장이 북한 국경경비총국 이명운 부국장과 북경에서 회담을 갖고 국경지대 치안문제를 논의했는데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북한인들이 절도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니 북한이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으로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1996.10.29.

23) 중국정부는 북한이 중국식 사회주의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대형광고를 마카오 신문에 게재한 사실에 몹시 불쾌해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앙일보」, 1996.2.28.

24) *China Daily*, 1996.2.27.

25)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전체회의, 李鵬총리의 정부 공작보고서. 1996.3.5. 한편, 중국 공산당 중앙위 서기처서기겸 국무원 부총리 姜春雲은 중국은 국제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쌍방간 친선협력 증진을 확고히 고수해 나갈 것으로 중국과 북한은 「순치관계」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북한 「중앙방송」, 1996.4.14.

26) 지난 21일 중국은 방문한 홍성남외에 당이론잡지 「근로자」책임주필 양경복(4.29~5.12), 당친선참관단(단장 함남도당비서 박창호, 5.14~17), 출판총국 부총국장 김관희(5.22~) 등이 북경을 방문하였다. 4월 27일 중동순방길에 북경을 방문하였던 김영남

나. 군사·안보

북한과 중국은 안보 측면에서 군사적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조·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체결 35주년을 맞아 쌍방간의 친선발전과 협력증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군사동맹조약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급격한 정책전환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 북한 인민 무력부 대외사업국장인 이상우 소장을 단장으로 한 군사대표단 일행이 3월 25일 遲浩田 국방부장을 만나 회담을 가졌으며,²⁷⁾ 중국 국무원의 羅幹 비서장겸 국무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우호대표단이 조·중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 조인 35주년(1996.7.11)을 맞아 중국을 방문(1996.7.10~13)하였는데 중국 각료가 북한을 방문한 것은 김일성 사망 이후 처음으로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²⁸⁾ 李鵬총리는 중국을 방문한 북한의 김윤혁 부총리를 접견하면서 “35주년을 맞는 중·조간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은 양국간 전통적 우호의 상징”이라는 표현으로 양국간의 우호협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등, 중국과 북한은 협력 강화를 다짐하고 있다.²⁹⁾

다. 「4자회담」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해서 한국은 비록 정전협정 서명국은 아니지만 한반도 평화체제의 직접적인 관련 당사국임을 규정하면서 북한의

부총리 겸 외교부장은 이성대 대외경제위원장이 동행하였다. 북한 「중앙방송」, 1996. 5.25.

27) 북한 인민 무력부 대외사업국장인 이상우 소장을 단장으로 한 군사대표단 일행은 양국간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上海, 南京, 楊州 등을 방문하는 등 지방군구를 시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人民日報」, 1996.3.26.

28) 「時事通信」, 1996.7.3.

29) 「新華通信」, 1996.7.10.

북·미간의 평화협정 주장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은 정전협정 서명국의 일원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4자회담 참여의사를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다.³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남·북한, 북·미간의 문제해결 방법과 절차상의 차이점인데, 錢其琛 중국외교부장은 크리스토퍼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한·미 양국이 제안한 4자회담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의 뜻을 보였으나 직접당사자간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³¹⁾

중국이 4자회담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것은 중국이 미국에 맞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강화해야 한다는 중국내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³²⁾

이에 따라 錢其琛 외교부장은 최우진 북한외교부 부부장과 한반도 4자회담을 비롯한 양국간 관계증진방안을 논의하였다. 錢其琛부장은 양국간 교류협력 강화 및 국제적 사안에 대한 협력을 강조하였으며 최부부장은 현 국제 정세에서 양국의 전통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한 것으로 알려졌다.³³⁾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4자회담」에 대해 북한은 미국의 견제세력인 중국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으나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라. 경 제

북한의 1996년 상반기 대중국 무역실적은 총 2억 4,800만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9.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1996년 6월까지

30) 沈國放 중국외교부 대변인 1996.4.16 발표.

31) 「讀賣新聞」, 1996.4.20.

32) 이 연구회에 참여하는 정부기관은 사회과학원, 대외무역경제협력부,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중앙당학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海日新聞」, 1996.5.1., 「중앙일보」, 1996.5.2.

33) 「新華通信」, 1996.6.6. 이에 앞서 최부부장은 4일 唐家璇 외교부 부부장과 회담을 갖고 1) 4자회담 2) 중국의 대북한 경제원조 3) 고위 인사교류 등 양국간 공통 관심사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대중국무역은 수출 2,700만 달러, 수입 2억 2,100만 달러 등 총 2억 4,800만 달러를 기록하여 지난해 상반기보다 수출은 21.7%, 수입은 7.2%가 각각 감소하였다. 한편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식량은 지난해에 비해 112% 증가하였다.³⁴⁾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 북한간에는 공식무역보다는 밀무역이 성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 기관원들의 부패현상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중국이 양국교역시 경화로 현금결제를 요구한 데 대해 불만을 계속적으로 강하게 표시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 대외경제무역부가 1996.2.25에 예고한 변경(국경)무역 관리감독 강화방침에 따라 북·중 변경무역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사정을 타개하기 위하여 북한정무원 홍성남 경제담당부총리가 중국을 공식 방문(1996.5.21~25)하여 식량·석유 등 중국의 대북한 경제 원조에 관한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였다. 북한의 부총리급 인사가 중국을 방문하기는 지난해 1월 김복신 부총리 방중 이후 1년 4개월만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북·중관계가 호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5월 22일 북한에 2만 톤의 식량을 제공하기로 하는 한편 경제·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북한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³⁵⁾

이 후 중국은 북한에 각종 경제원조를 약속하는 한편, 북한의 경제난 타개를 위해 식량·원유·코크스 등을 최대한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羅幹 비서장과 이종옥 북한 부주석간의 회담에서 중국이 북한에 10만 톤의 식량을 무상원조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통보하였다.³⁶⁾ 또한 중국은 향후 5년간 북한에 곡물 50만, 석유 130만, 코크스 250만을 절반은 무상으로 나머지 절반은 국제가격의 3분의 1수준의 싼값에 제공하기로 비밀리에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³⁷⁾

34) 「주간 북한동향」(서울: 통일원 정보분석실, 1996.8.17~8.23).

35) 「중앙일보」, 1996.5.23.

36) 「人民日報」, 1996.7.12.

37) 「海日新聞」, 1996.7.18. 유상으로 제공될 곡물, 석유, 코크스 중 절반(전체의 25%)은 외화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금지불이 불가능할 경우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V. 결론 : 중·북한관계 전망

갈등과 화해의 관계를 거치면서 중국과 북한은 새로운 동북아 질서형성 과정에서 전략적 유대관계를 맺으려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앞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³⁸⁾ 현재 중·북관계에서 서로 경합하고 있는 상이한 경향들을 검토함으로써, 중·북관계의 변화가능성 및 향후 북한의 변화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예측해 보도록 한다.

아직까지도 가장 폐쇄적인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중국은 중국형의 개혁·개방 모델을 시도해 볼 것을 추천해 왔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정치적 입장에서는 四項原則堅持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며, 반면에 경제정책에서는 순환적인 개혁기와 긴축기를 거치면서 개혁·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중국공산당이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시행하고 전면적 가격개혁 및 신과산법 등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실업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총체적 부패문제로 인해 국가적 위기를 겪을 수 있다. 아울러,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중국과 인접국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5년간 연평균 9%가 넘는 고도성장을 통하여 중국은 동북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주체로 부상하였으며, 지금까지의 성과에 기초하여 보다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경제개혁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특히 상해·포동지구는 금세기 말부터 세계금융중심센터로 부상되어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중국은 연안지방을 중심으로 지정된 경제특구를 폐지하고 전지역을 개혁·개방지역으로 전환함으로써 2020년대의 경제대국을 향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경제발전전략을

38) 구중서, “등소평 사후 중국의 정치체제 변화와 한반도,” 『등소평 사후 중국의 장래와 한반도』,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5.4.11, pp. 16~36 참조.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은 자국의 안보전략에서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는 북한이 경제난으로 인하여 붕괴되는 상황을 결코 원하지 않으며, 북한의 경제적 내구력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북한이 고립정책을 탈피하여 세계경제체제 내로 편입할 것을 지속적으로 중용할 것이다. 중국의 이러한 정책권고에 따라, 북한은 나진·선봉지역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에 대한 경제특구선정을 확대하고 제도정비를 통하여 현재의 소극적 개방정책에서 벗어나고자 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좀더 적극적인 개방을 추진하게 된다면, 북한은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중국 이외의 선진자본주의국가들과 경제적 관계의 확대를 원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은 개혁·개방과정에 적합한 새로운 동북아 국제질서의 확립을 위해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미국·대만 등을 포함한 국제정치 행위자들과 보다 적극적인 외교관계를 확립하고자 할 것이다.

중국과 북한이 각각 자국의 개혁·개방과 체제전환을 위해 경제적 이해를 중심으로 외교관계를 추진해 간다면, 중·북관계는 선택적 유대관계의 형태를 띠고 발전할 것이다. 이 경우, 중국과 북한은 상대방에 대한 군사적·전략적 기대에 의존하기보다는 서로를 경제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외교상대국 중의 하나로서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동북아에서 미국주도의 신질서가 형성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고, 중국과 미국을 축으로 한 세력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반미패권전략을 지속적으로 표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동북아 지역의 각국은 자국의 이익추구를 바탕으로 동북아에서의 정치·경제적 질서 구축을 추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미·중관계의 변화는 남한과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관리체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에도 반영될 것이다.

중국은 개혁·개방과 현대화건설에 유리한 국제환경 조성이라는 대외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특히 중국은 「全方位外交」 추진 불변정책을 바탕으로 서방의 지속적 대중투자를 유치하고 무역 및 기술 이전을 유도하

며 WTO 가입을 통한 세계경제권 편입 및 국제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또한 경제력 성장에 부응하는 군사력, 특히 해군과 공군을 증강시킴과 동시에 아·태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군비증강 노력은 역내의 질서재편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미국과 일본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또한 중국이 인권문제 등에 있어서는 서방측에 다소 신축적인 자세를 표시할 수도 있으나, 대만·티벳·남사군도 등 주권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강경노선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앞으로 긴장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미·중간의 갈등적 역학관계는 지속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질서재편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홍콩과 대만에서의 사태전개에 따른 미·중관계의 악화는 직접적으로 중·북관계 및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은 자국의 현대화를 위한 주변 정세 안정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고자 한다. 중국의 시장경제원리 도입과 개방화대로 인해 한·중간의 각 분야별 교류가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지속적 경제성장 및 국제적 지위향상에 따라 중국은 한국과의 협력강화 필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될 것이며 한·중관계는 더욱 긴밀해질 것이다.

그리고, 중·북관계는 혁명 1세대간의 관계가 종식되어 과거보다는 실리에 기초한 관계로 변화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 사회주의 국가의 연대감, 전통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은 북한과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체제 전반에 걸친 내구력 증진과 관련하여, 중국은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과 북한은 우호적 변방관계로 남을 가능성이 많다. 중국은 북한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북한과 혈맹관계를 약화된 형태로나마 유지하려고 할 것이고, 북한은 북·미회담에서 경수로 타결을 확정지은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중국과 미국을 동일한 카드로 간주하고자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에 대한 어느 정도의 등거리 정책을 취하고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정치면에서는 중국과 유대를 강화하되, 안보·경제면에서는 미국과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고자 할 것이다.